

'전북 막걸리 대축제' 허위 공문 발생

난장판 물의에 이어 '장소 요청의 건' 공문에 후원사·협찬사·언론매체 홍보 등 부풀려

상업성 짙은 행사로 물의를 빚은 '2017 전북 막걸리 대축제'가 허위 내용이 담긴 행사 관련 공문서를 전주시에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뉴시스 전북본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행사를 주최한 막걸리축제 조직위원회와 모 신문사는 행사에 앞서 '2017 전라북도 막걸리 축제 장소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전주시에 공문을 보냈다.

조직위가 제출한 문서의 내용을 보면 후원사로 국회를 비롯해 한국관광공사 등 여러 정부기관과 전북 14개 시·군, 언론사 6곳 등 총 27곳이 명시돼 있다.

또 협찬사 역시 행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맥주 회사까지 넣었다.

게다가 행사 홍보 부문 중 언론매체 홍보에서는 중앙지와 지역 일간지, 방송사, 통신사 등 수많은 언론사가 망라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공문에 명시된 일부 언론사 등은 매우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공문 내용으로만 보면 27곳에 달하는 후원사가 명시돼 있어 이는 행사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장소 허가를 내준 전주시 측에서도 쉽게 무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축제는 20여개의 부스를 설치해 술과 음식을 판매하는 난장 형식으로 진행됐고, 초대 가수 및 각설이 공연 등으로 꾸며졌다.

이들 간의 축제에 의해 지난 8일 오전까지 행사장이었던 노송광장은 시끄러운 막걸리와 음식 냄새로 진동한데다가 주최 측이 부스를 곧바로 철거하지 못해 어수선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시민들에게 광장을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광장을 무료 개방하고 있는 전주시가 축제의 성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장소 허가를 내줘 축제 허가가 타당한지에 대한 시비가 일었다.

이에 대해 김은구 막걸리축제 조직

위원장은 "단지 맨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언론사 홍보 부문 역시 예산을 받아 홍보 협조를 부탁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계획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후원 명칭 부문에 있어서도 본 행사를 앞두고 후원사 협조가 안된 기관들은 확인해서 빼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문에 후원사가 달리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별다른 확인은 하지 않았다"며 "이번을 계기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축제 성격을 파악해 선별 개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시, '중·장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구직자 50여명 부안 아람 공장 방문·20여명 채용 확정

전주시가 40대와 50대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했다.

시는 8일 부안 (주)참프레 공장에서 전주시민 중 생산직 일자리를 희망하는 60세 이하 중·장년층 구직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9회 중·장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공장견학 및 현장면접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일자리 특성상 취업취약계층인 중·장년층 구직자들의 취업지원과 생활안정을 돕고, 국내 최초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건강한 닭 생산과 제품 출하 성수기에 대비해 대규모 많은 인력이 필요한 구인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한 업체는 (주)참프레 협력업체이자 닭고기 가공·제조업체인 (주)아람으로, 이번 현장면접을 통해 20명이 채용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4월에 이어

을 들어 두 번째 공장견학으로 구직자들이 생산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생산 공정을 견학하면서 현장을 고스란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구인업체에 대한 신뢰감과 직무에 대한 궁금증 해소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장면접 행사는 업체 현장 방문을 통해 인사 초기 이직을 방지하고, 취업 취약계층들이 직접 업체로 찾아가는 구직비용 절감 및 생산 현장 확인을 통한 명확한 구직결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시는 내년에도 대규모 취업박람회와 비교해 예산대비 효율적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총 8회 이상 개최, 중·장년층,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청년층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인 인원이 5인 이상인 업체는 전주시청 일자리지원센터(063-281-2812)로 구인신청을 하면, 집중적인 맞춤형선상사시 현장면접을 통해 인력채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민근 기자

차별금지법 전북공동행동 출범

사회적 차별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전북공동행동'이 출범했다.

차별금지법전북공동행동은 8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기본법이 차별금지법이다"라며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구체적인 제도와 국가 의무를 명시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의 이득만을 쫓는 일부 세력에 의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에서도 인권조례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권은 지난 10년 동안 차별을 금지하라는 외침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기자



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사회적 차별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전북공동행동'이 출범했다.

김제 양계장 화재... 닭 3만 마리 폐사

8일 오전 7시 5분경 김제시 용지면의 한 농업법인 양계장에서 불이 나 기르던 닭 3만 마리가 폐사했다.

또 양계장 내부 96㎡가 타고 천장이 그물러 소방서 추산 4,85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에 의해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원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김재철 MBC 前사장 9일 구속심사

국정원 장악 결탁 의혹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방송 장악에 결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철(64)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9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사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구속 여부는 9일 늦은 밤이나, 10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국정원 관계자와 협력해 방송 제작에 불법으로 관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김 전 사장이 국정원 관계자와 공모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에 제시된 로드맵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 전 사장이 'PD수첩' 등 정부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진·진행자·출연진 교체 및 방영 보류 제작 중단 등

을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사장이 MBC 직원 겸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교육 명령을 내렸다고 보고 노조 운영 개입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접수한 뒤 이 사건 수사에 착수, 지난달 30일 김 전 사장을 비롯해 백종문 부사장,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 등 당시 MBC 간부 3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MBC를 담당하던 국정원 직원,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김 전 사장은 지난 8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다음날 새벽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전 사장은 출석 과정에서 "MBC는 방송장악을 할 수 없는 회사"라며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국정원이나 청와대와 교감 없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에코시티·만성지구에서 시내버스 운행한다

전주시, 12월 중순·내년 2월 입주 시기 맞춰 노선 부분 개편

전주시가 에코시티와 만성지구에서 입주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 조정기로 했다.

시는 오는 12월 중순과 내년 2월 등 2단계에 걸쳐 전주시내버스 노선의 부분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오는 12월 중순부터 내년 2월 까지 총 5,686세대가 순차 입주하는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주민들에게 대

중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우선, 시는 오는 12월 에코시티 입주 주민들을 위해 1단계 노선을 조정할 예정이다. 1단계 노선조정은 별도의 증차 없이 19번과 49번, 62번, 131번, 554번, 559번 등 기존 6개 노선을 조정 운행하는 방식으로, 총 17대, 하루 177회 운행된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노선 조정의 경우, 시는 노선 부분조정만

으로는 배차간격만 늘어나 기존 이용객의 불편이 야기되는 만큼 총 19대의 버스를 증차할 계획이다.

특히, 2단계 노선조정을 통해 하나로클럽-만성지구-전북혁신도시-전주대학교-풍남중-평화동 종점을 연결하는 74번 노선과 송천동 종점-에코시티-동부대로-전주역-모래내시장-객사-예수병원-전주대를 잇는 108번 노선 등 2개 노선이 신설되고 기존 노

선의 운행코스도 일부 변경될 예정이다. 에코시티·만성지구 입주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그동안의 민원사항을 반영해 불합리한 노선과 시간표를 함께 조정, 2개 노선을 신설하고 20개 노선을 조정할 예정이다.

노선개편 이후 에코시티에는 총 9개 노선 39대의 시내버스가 하루 412회 운행되고, 만성지구에는 총 4개 노선 28대의 버스가 하루 264회 운행된다. 송준상 시민교통본부장은 "단계적인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불편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